

김효석 “야권 연대 무공천 못 받아들여”

“광주·전남 민심이 민주당 지도부 것인가” 민주, 시민배심원제 이어 ‘野 연대’ 시끌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놓고 흥역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야권 연대의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야권 연대를 위해 호남 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를 포기하고 타 야권에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17일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제3차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야권 연대를 위한 중앙당의 호남 일부 자치단체장 무공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지도부가 순천 등 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장을 야권 연대 지역으로 거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지도부가 마치 광주·전남 민심이 모두 민주당의 것인 양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같은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야권 연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지도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방선거 야권 연대를 위한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양보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권 연대 지역으로 거론되는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민주당 예비 후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경선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연대를 위해 무공천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남 모 기초단체장 후보는 “호남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안이한 인

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현실적으로도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야권 연대 후보가 나오더라도 민주당 성향의 후보에게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야권 연대를 위한 민주당 무공천 지역으로 유력하게 떠오른 광주 남구의 일부 후보들은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중앙당이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고 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무공천지역으로 정하면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은 무엇이 되느냐”면서 “지도부가 언제까지 오락가락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야권 연대와 관련, 호남지역의 기초단체장 무공천은 지역의 반발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방의원 공천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타 야당 측에 기초단체장을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방의원 선거에서 연대를 이루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 야당 측에서는 광주 서구청장, 북구청장, 남구청장 후보 가운데 1명과 순천시장 후보를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협상 타결에 실패한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 선거연대인 5+4 협의체는 이날 저녁 다시 만나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임동욱·최권일 기자 tuim@



김효석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17일 열린 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야권연대를 위한 호남 무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당원 동원 능력’이 승패 가른다

■ 전남지사 ‘체육관 경선’ 누가 유리한가 우대당원 서부권 무안·나주 등 5개시군 편중 일반당원 유권자 비율 배분땀 동부권 많이 포함

민주당이 전남도지사 경선방식을 주민여론조사와 당원 직접투표(이하 체육관 경선) 결과를 50%씩 반영해 선출하기로 함에 따라 체육관 경선이 전남지사 경선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선거인단 규모와 구성비율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체육관 경선은 선거인단 동원 등의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지 모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선거인단 구성이 어떻게=17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체육관 경선에 참여할 당원 숫자는 중앙당 선관위에서 결정하지만, 대략 3천~4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사 당원 직접투표는 오는 4월17일 특정 장소에서 후보자들이 정견발표를 한 뒤 당원들이 직접 투표해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를 뽑게 된다.

당원 선거인단은 2009년 6월부터 당비를 납부한 우대당원 50%와 일반 당원 50%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전체 당원 숫자는

24만여 명이며, 이중 우대당원이 2천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당이 경선을 위해 당비 납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우대 당원을 2천여 명 안팎으로 인정할 경우 선거인단 구성비인 우대당원과 일반당원과 5대5의 원칙에 따라 일반 당원 2천여 명이 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원 선거인단 규모는 우대당원과 일반당원 각각 2천여 명 등 총 4천 명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대당원과 일반당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후보가 체육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누가 유리하나? = 현재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주승용 국회의원, 이석형 전 환경군수 등 3명이 차기 전남도지사에 도전하고 있다. 이중 박 지사와 주 의원이 가장 많은 당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당내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이 전 군수가 꾸준한 여론지도 상승으로 당원 표심을 상당 부분 파고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우대

당원이 무안과 나주, 해남 등 전남 서부권 5개 시·군에 편중해 있어 박 지사가 ‘체육관 경선’을 하더라도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 의원 등은 우대당원을 엄격히 심사해 허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한가지 변수는 일반당원의 구성이다.

시·군 유권자 비율에 따라 당원을 배분할지, 당원 비례 할당 방식을 도입할지도 관심거리다. 유권자 비율로 따지면 인구 수가 많은 동부권의 당원이 선거인단에 많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전남 동부권의 지지율이 높은 주 의원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지만, 현장분위기와 ‘당원 동원 능력’이 표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육관 경선의 경우 선거인단 동원 등의 폐해가 있어 어느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을 더 동원하느냐에 따라 승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현재 중앙당이 우대당원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어 정확한 선거인단 규모는 좀 더 기다려야 알 것”이라며 “체육관 경선은 당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경선일에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냐에 따라 우열이 가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 대법관수 14명→24명으로 증원 추진

향후 10년내 경력법관제 전면 시행

한나라당은 17일 대법관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대법관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되 연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10년내 경력법관제를 전면 시행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제

도개선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10가지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2-3일내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법관수 대폭 증원과 더불어 임명자격 요건을 ‘경력 15년

이 넘는 40세 이상의 법조인’에서 ‘20년이 넘는 45세 이상 법조인’으로 강화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대법관의 3분의 1은 비(非)법관 출신으로 임명토록 했다.

또 임명과정에서 대법관 추천위 추천을 거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추천위원 자격과 구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신규법관 임용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10년 이상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기타 변호사 자격을 갖고 법률의 직에 종사한 자 가운데 법

관을 임용하고, 10년내 경력법관제를 전면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관 3인, 법무부장관 추천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2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추천 2인 등 9인으로 법관인사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관인사위는 관사 보직, 정보 발령에 대한 의견권을, 관사연임에 대해선 심의기능을 갖게 된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객관적인 법관평정 기준을 마련, 법관의 근무성과 자질을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법관 연임과 보직, 정보 등 인사관리에 반드시 반영토록 했다. /연합뉴스

우근민 불러놓고 우습게 된 민주당

공천 배제... 탈당 후 제주지사 무소속 출마 예상

민주당은 복당 후 성희룡 전력 시비에 휩싸인 우근민 전 제주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극약처방은 이 문제를 서둘러 진화하지 않으면 ‘개혁공천’이란 구호 자체가 무색해지면서 6.2 지방선거 전략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우 전 지사의 경우 당헌에 명시된 공천배제 기준(금고형 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여론의 심상감 때문에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심위 간사인 오영식 전 의원은 “당원 자격과 공직후보자 자격의 부여 기준은 잣대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후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우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경선참여 자격 여부를 묻는 당원 여론조사를 하자고 역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있긴 하지만 반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승리 지상주의에 매몰돼 문제 인사를 영입했다가 비판 여론에 때릴러 스스로 처내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한 셈이 됐다. 지방선거를 통해 ‘권도중래’를 노리는 우 전 지사 또한 정치인 이미지에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우 전 지사는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사태는 한층 더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그는 “정치적 신의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격양된 감정을 드러냈다.

이제 민주당은 제주지사 후보 공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연합뉴스

회사매각공고

- ◆ 위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산알미늄(주)
 - 알미늄제조(압출) 공장
 - 연매출액 100억
- ◆ 특징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 062-523-0004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선거 홍보물 제작·시공

대형현수막, 홍보물, 명함, 배포, 현판, 간판

www.jwad.co.kr

광고대행

총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73-2285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